

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지역 축제를 대하는 태도

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새로운 관계 인구의 유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역사·문화·자연·경관·음식·특산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축제를 유지하는 목적은 지역 활성화다.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정주민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3년 연속 인구 감소에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는 현실에서는 지역의 정주민구를 늘리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정주민구를 우선 늘리기 보다는 지역과 관계를 지닌 외부인인 관계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 중 하나가 지역축제 개최인 셈이다.

2023년에는 분명 지난해보다 더 많은 축제들이 개최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계시되어 있는 올해 지역 축제에는 전국을 통틀어 1129개나 된다. 전라남도도 전라북도에서도 문화관광부터 생태자연, 농촌문화와 특산물 등 다양한 주제의 687개 축제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 많은 축제들이 과연 축제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이들의 기대치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을까? 일단 성공을 위해서는 방문자들이 많아야 할 텐데 그들을 오게끔 하는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것을 갖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어떤 축제에서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가?

독일을 대표하는 뮌헨의 옥토버 페스티벌, 일본을 대표하는 교토의 기온 마츠리 등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를 들여다 보면 그 답을 찾을 수도 있다. 작게

출발한 각 지역의 축제는 그야말로 그 지역의 역사, 가치 그리고 문화를 담은 지역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비교적 다른 축제들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옥토버 페스티벌은 바이에른 왕실의 결혼식을 기념하는 경마 경기가 국민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비롯되었다.

기온 마츠리의 경우 교토가 수도였던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 퇴치를 기원하는 데서 시작되어 이제는 10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축제가 맥이 끊어지지 않고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원동력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축제를 대하는 진심이 방문자들에게 전해졌고 그러한 지역민의 진심이 사람들은 감동했다.

축제를 만드는 사람, 축제에 가는 사람 모두 축제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있다. 특히나 자신이 속한 현실과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많은 기대와 환상을 다 충족해야만 한다는 욕심을 조금 거둬 내면 어떨까. 내가 살고 있거나 또는 내가 방문하는 지역의 따뜻한 정감을 발견하는 태도를 갖춰 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다면 올 한 해 광주와 전라도를 넘어 전 지역의 그 많은 축제는 이미 성공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지역 주민이 스스로 즐겁고 방문자가 즐거운 축제의 장에서라면 호스트와 게스트는 서로 진심과 공감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맺어진 관계는 그 지역의 축제를 떠나서도 그 후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차 시간에 맞춰 광주 송정역 앞에 도착해 보니 마침 이른 아침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도착했는지 역 주변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광주로 업무 차 온 사람들과 그들을 마중 나온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는 활기찬 역 풍경을 보며 경쾌하게 발걸음을 옮기다 문득 귀가 뜨였다.

“와! 광주는 예향이라면서요? 올해 광주랑 전라도에 축제도 엄청 많다던데, 어때요?” 그 질문에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갔다. 분명 광주가 고향이 아닌 누군가의 질문이다. 지나치며 들은 그 질문은 마치 도플러 효과처럼 순간 크게 들렸다 이내 사라져 버렸지만 뒤를 이은 답과 계속될 그들의 대화가 자못 궁금했다.

기차를 타고 보니 그 방문자가 역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질문을 한 데 이해가 갔다. 기차 안은 그야말로 각 지역의 홍보 각축장이었다. 특히 코로나 전에도 이 정도나 실을 정도로 지역별 축제 홍보 열기는 뜨거웠다. 이토록 축제 홍보에 혈안이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아마도 지역 축제가 지역발전의 길을 터주고 지역을 유지하고 지향하는 원동력이 되어 준다고 보기 때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여고 교사·수필가

어째야쓰까

“으째야쓰까”는 남자나 젊은 여성들은 잘 쓰지 않는다. 쓰더라도 이상하게 맞잖아 안 난다. 주로 남자들은 “환장하겠네” “저런 저런”하는 감탄사도, 젊은 여자들은 “어머나” 또는 “어찌지” 정도로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드러냈다.

할머니의 “으째야쓰까”에는 화음이 들어있다. “어머나”가 ‘어’에 약센트가 들어가 놀람의 표현이라면 “으째야쓰까”는 처음 ‘으’를 낮추거나 마지막 ‘까’를 길게 빼서 자기 정서를 담백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어찌지” 하는 말이 당황한 혼잣말이라면 “으째야쓰까”는 상대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오롯이 담아낸다. 그건 골목길에서 지팡이를 짚고 하리도 좀 굵어 나오는 소리다. 누룩과 쌀이 비바람과 잘 버무려져서 숙성된 깊은 맛이랄까. 그들 언어와는 결코 무게부터 다르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활짝 웃으시며 “어째야쓰까! 어째야쓰까!”를 연발하셨다. 할머니는 꼭 안타깝거나 애달픈 상황에서만 이 감탄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락 프로그램을 보고 오지게 재밌다며 “어째야쓰까”를 연발하셨고 마을 잔치할 때나 손자가 재물을 부릴 때도 “어째야쓰까” 하면서 자지러지셨다.

어쩔 ‘으’보다 ‘어’에 가깝다. ‘어’는 ‘으’보다 다소 힘이 빠진 그러니까 “어째야쓰까”는 “으째야쓰까”보다 더 긍정적 의미로 쓰신 것 같았다.

‘으’는 출발부터 무겁다. 어떻게 손을 쓸 수 없거나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두말할 도움을 요청하는 연민의 감정이 담긴 반면, 즐겁거나 기분 좋을 때는 시작부터 가볍고 밝은 ‘어’가 나왔다. ‘으’가 가슴 깊은 바닥에서 나온다면 ‘어’는 주저 없이 나오는 입말이다. 터널 입구에 도달한 기차가 ‘으’ 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그 무게를 털어내고 경쾌하고 발랄하게 ‘어’로 변조된 느낌이다.

거기에는 수많은 세월과 역사, 웃음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광복과 6·25, 4·3과 어순은 물론 광주도 오롯하게 숨 쉬고 있다. 아버지 결혼도 나의 출생도 들어있다. 가난과 굶주림, 죽임과 죽음은 다 지켜본 이의 마음이 들어 있다. 곤고한 삶의 딱지와 그것을 떼어내며 살아야 했던 짙긴 숨이 어찌면 그 언어 없이는 할머니는 한시도 살 수 없었는지 모른다. 그 언어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할머니를 살리고 할머니를 위로해 주었는지도 모른다.

유년에 내 귓가로 수없이 스치고 지나간 바람 소리 같은 할머니의 독백, 그 한 맺힌 낄두리가 귀에 아직도 쟁쟁하다.

“으째야쓰까”나 “어째야쓰까”는 당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웃이었으며 삶 자체였지 싫다.

누군가를 걱정하고 위로해 주는 존재의 집, 이런 값지고 따뜻한 말들이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 으째야쓰까…….

꿈꾸는 2040



임용철
위민연구원 이사

다시 거리로 나선 사람들

제안에 한국협상단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

아베의 집권으로 일본은 우경화가 심해졌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한국 사법부에 배상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에도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며 마침내 2018년 ‘전범 기업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모임에서는 미쓰비시와 협상이 잘 안되거나 잘못된 과거사에 반성이 없는 아베 정권에 대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는 했지만 이번엔 그 대상이 한국 정부이다. ‘일본과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삼일절 기념사에 이어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사과 한마디, 배상금 한 푼 없이 우리 국내 기업의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보상을 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해법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일본의 주장이 사실상 그대로 관철된 것으로 일제의 ‘식민 지배는 합법’이라는 일본 우익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한낱 종일장으로 만들어 버린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라 할 수 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들에게도 씩

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는 2차 가해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뺏아 버린 일본을 오가며 30여 년 동안 ‘일본 정부는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양극단 할머니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이번 정부 발표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일제 피해자들은 잘못을 저지른 가해 기업들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지, 그저 아무나 주는 돈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다. 국민적 자존심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한 것도 부족해, 일본이 일·킨 전쟁에 동원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던가? 어떻게 목숨 바쳐 되찾은 나라인가? 그런데 사죄도 부족할 판에 일본에 물어 줘야 할 배상금을 피해국인 우리가 대신 뒤집어 쓴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1964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반대하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18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1만 5000명이 나서는 등 총 3만 명이 거리로 뛰어나와 극렬한 투쟁을 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 조치로 시위의 주동 인물과 배우 세력으로 지목된 언론인과 정치인 등 1142명이 검거되었다. 그중 한 명이 한나라당 후보로 대통령인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이재오, 김택룡, 서정원 등 쟁쟁한 사람들이었다.

광주에서 서명을 받고 있던 그 시간 서울에서는 서울 시청 광장에서 강제동원 굴욕 해법 강행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제2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다.

社說

지자체마다 다른 청년 기준, 통합 조정 어렵나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청년 나이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한 청년 연령은 물론 정책별 지원 대상이 각기 다르다 보니 각종 복지 지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지자체 가운데 전남도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 장성군은 조례상 청년 연령을 18·19·39세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영광·무안은 18·19·4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나머지 14개 군은 18·19·49세를 청년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책별로도 지원 대상 나이에 차이가 있다. 전남도가 지원하는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은 49세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 희망 다짐통 통장’은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가 하면 ‘청년 월세 지원’(1인당 월 20만 원씩 1년간)은 19·34세, ‘청년 문화 복지비’(1인당 연간 20만 원)는 21·28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기준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 ‘청년 기본법’과도 차이가 있다.

수도 요금도 지역별 편차…불균형 개선 노력을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다른 수도 요금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수도 요금 평균 단가(㎥당)가 가장 비싼 지역은 1133.91원을 받는 고흥군이었다. 515.71원으로 가장 싼 곡성군과는 최대 2.1배 차이가 났다. 광주의 수도 요금 평균 단가는 644.11원으로 생산 원가 740원과 비교하면 요금 현실화율(원가 대비 사용자 비율)이 87.1%에 달했다.

수도 요금은 지자체별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정해지는데, 광역상수원인 주암댐과 동북댐에서 공급된 물의 원가를 보충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여기에 상수원 개발의 용이성, 광역상수원과 물 공급 지역과의 거리, 정수 처리 비용, 수돗물 생산 시설의 규모, 급수 인구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별 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천지 차

청년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연령 기준이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고 정책별로도 오락가락하다 보니 복지 혜택의 편차가 크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에선 고령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분석도 있다. 통계청 집계 결과 우리나라 중위 연령은 2003년 33.5세, 2013년 39.7세, 2023년 45.6세로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청년 인구는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청년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대상자가 갈수록 줄어드니 청년 나이 상한을 높이는 지자체들이 많다. 농촌에선 실질적으로 40~50대가 청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 집행에서 통일성은 필요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청년 인구는 39만 1309명으로 전체 인구의 21.5%를 차지하고 있다. 달라진 인구 구조에 맞게 법과 조례상 청년 연령 기준을 통합적으로 조정해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순천시 87.3%(평균 단가 872.61원, 생산 원가 1000원)에 이르지 만, 진도군은 29.5%(평균 단가 530.83원, 생산 원가 1800원)에 그치고 있다.

누수와 관로 관리 소홀 등도 지역별 수도 요금 편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수장에서 생산에 공급된 총수량 중에서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을 말하는 비율인 ‘유수율’과 물이 새어나가는 비율을 의미하는 ‘누수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요금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낮은 관로가 많아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은 그만큼 수도 요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전남 지자체의 수도 요금이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제성과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 일선 시군은 노후 수도관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 누수 요인은 줄이고 유수율은 높이는 등 상수도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조선시대에 도굴은 중대 범죄였다. 성종 대인 1480년 임은(林垠)은 흥덕 현감 시절 고분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고총(古塚)을 파헤쳐 인골을 방치하고 은기(銀器)와 유기(鑰器)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성종은 그의 직첩을 거두고 관리 책임음을 막았다. 세종(1446년)은 국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예전에 국군(國君)의 장사에 금·은을 쓰지 않았던 것은 후세에 도굴당하는 근심이 있을까 염려한 것”이라고 일깨운다. 이어 “중궁(中宮)

하고 도굴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담당 재료는 무덤을 헐고 반출한 흙과 들어갔다.

도굴이 거의 자취를 감춘 요즘에는 공식 발굴과 복원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이 논란이 된다. 지난해 경남 김해시에서 구산동 지석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화재 훼손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 11명이 무더기 징계 조치를 받았다. 최근 경찰과 문화재청 현장 조사에서는 박석(얇고 넓적한 돌) 1000여 개를 발설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도굴과 훼손

구산동 지석묘 사례는 마한 문화유산을 관리하에게 의논해 아뢰게 하라”고 교시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묘에서 금덩이 운다’는 전설의 고분을 찾기 위해 전국을 누벼 성한 무덤이 없을 정도였다. 조선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1000여 점에 달하는 고려자기를 씌우려 한 장물아비였다. 그의 광적인 수집이 도굴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는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장을 지낸 아리미즈 교이치는 회고록 격인 ‘조선 고고학 75년’에서 경주 민간인들이 담장을 쌓아 고분을 은폐

를 광주·전남 지역에도 시사점이 없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 조직의 비전문성이다. 사건 발생 당시 김해시 문화유산과 과장과 팀장이 모두 토목 직렬이었다고 한다.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학예자 공무원은 한두 명 뿐이어서 현장 업무는커녕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역부족이다. 마한사 복원에 맞춰 학계와 자치단체가 전문 인력 양성과 확충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속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실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